

정세균 “20대국회사 개헌문제 매듭 노력”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헌법개정 추진과 관련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효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라며 “그런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윤근 국회의장 내정자의 4월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언제(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언제 투표하고 어떻게 나가는 것은 지금 내 입장에서 빠른 느낌이 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개헌) 특위는 의장 의지로운 필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런 의지를 피력하기보다는 정당지도자들과 사전에 의논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며 “아주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통해 이 문제가 흥뜨라지지 않게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말을 아끼는 게 이 문제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세”라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개헌에 관해) 내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은 있지만 내 이야기나 생각을 실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인 의견은 있지만 자제하려는 생

- “공감대 만들어가는 게 시간 세이브하는 방법”
- “국회법 개정안, 법제화가 바람직…직권상정은 글썽”
-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민높이 맞게 개정돼야”
-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 직접고용 방안 찾겠다”

각”이라며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서 각국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개헌 논의를 계속 지지부진할 게 아니라 미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돕겠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노(No)’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다. 정권은 실패할 수 있어도 국가는 실패하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는 재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직권상정 방식으로 처리할지, 의원 제발의 방식으로 처리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 국민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져 있다”며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하고 공감한다”고 국회법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 절차를 통해 같은 취지 혹은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런데 역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국회법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폐기된 걸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연속해서 20대에 재의에 붙이면 되느냐에 따른 법적 논란이 있고 정당 간에도 이견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 내용은 법대로 하겠다”며 “역시 써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정 의장은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통해 국회가 과연 어떤 논리를 어떤 입장을 수용해야 하는지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겠다”며 “빠른 시간내에 그 문제를 매듭 짓고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개정안) 발의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는 좀 미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지금은 국회선진화법도 있고 또 나름대로 국회법을 정비했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제한한 법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한다”며 “의지의 직권상정은 매우 조심스

럽게 주의 깊게 사용돼야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직권상정에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정 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선 “소위 인기상임위원이란 특정 정파나 특정한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가 있는데 모두 매치시킬 방법이 없다”며 “아마 일과정에 시켜도 그건 못 맞출 것 같다. 근본적인 문제일면서도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지도부에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혜선 의원의 (상임위 배정) 수용하는 다른 방안이 나오면 해결이 돼 빨리 의정활동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관해선 “8년 개헌할 때의 시대상황과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권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국민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특권을 내려놓는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 성역이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국회 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우리 국회 구성원 중에는 환경미화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이분들은 모두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되신 분들”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직접 고용할 방안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도 문건위, 장애학생체육대회 해단식 참석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성일)는 16일 전주 라투체에서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해 전북선수단을 격려했다.

한인수 부위원장은 “장애를 딛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단 여러분들의 정신이발로 진정한 금메달”이라며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명영 기자

국민의당 ‘김수민 공천 의혹’ 조사않기로

국민의당이 김수민 의원을 둘러싼 밀실 공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6일 YTN라디오 “신물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공천 자체에 대해서는 잘차 면에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상조사단은 최고위 결정에 따라 임무를 부여 받았다”며 박지민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해 “(김 의원 공천은) 전략공천이고 절차에 따른 것이고 어느 당이나 비례대표는 전략공천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을 공천한 것에 대해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라면서도 “진상조사단에선 그 부분(공천)은 (조사)범위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그러나 밀실 공천 의혹 조사여부에 관해 “진상조사단에서 판단하고 진행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그는 “진상조사단에서 공천 과정까지 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의 거듭된 질문에도 “거기(진상조사단에) 물어보세요”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를 두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만큼이나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는 밀실 공천 의혹에 대해 당 지도부가 조사 배제 방침을 정하고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선관위 고발 당사자 중으로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진상 조사단은 아직 조사단 차원에서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이성주 기자

국민의당 전북도당, 도·교육청에 누리과정 TF 구성 대안 제시 촉구

국민의당 전북도당(이하 전북도당)은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조속히 누리과정 TF팀을 구성하고 전북 도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누리과정 예산 책임은 중앙정부에게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 책임 떠넘기기를 하지 말고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또 “19대 국회는 문제 인식만을 남긴 채 과거로 사라지고 3당 체제의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누리과정에서 서로가 윈윈하게 협력하지 못했던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과거 속으로 지워버리고 현재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준비 미래 전북 발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지도부와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은 누리과정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당 차원에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고 유성영 의원이 국회 교문위원장에 선출됐다”며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교문위원장과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명영 기자



누리과정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유보통합과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누리과정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유보통합과 누리과정 예산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보육단체 및 시설 대표자들과 보육교사 등 참석자들이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도의회 ‘카보타지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예정

박재만 의원 “자동차 환적화물 광양항만 취급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 지역차별 정책”

전북도의회가 지역무역항 몰락시키는 항만 카보타지 시행계획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 대정부에 강력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특히 환적화물은 하역작업을 2번 하기 때문에 수출입화물보다 그 부가 가치가 2배 이상이다. 또한 물동량 카운트 시 2번 카운트되기 때문에 물량증대 효과 역시 2배가 된다. 물동량집계가 늘어남은 것은 그만큼 중심항만으로의 도약이 쉽다는 것이다. 이런 각종 이점 때문에 국내 항만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환적화물 유치가 시달을 겪고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환적화물을 광양항만 몰아주겠다

는 해수부의 계획안은 안 그래도 열악한 광양항을 제외한 서해안 나머지 항들을 모조리 죽이겠다는 것이니 다름없다.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의 비상사적인 판매행정과 정부가 나서 항만물류의 독과점을 조장하고 있는 이 같은 정책을 규탄한다”며, “공식적으로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고도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도의회와 도 군산시는 중앙정권과 함께 항만 카보타지 시행안이 철회되게끔 최선을 다해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신명영 기자

취급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지역차별 정책”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특히 환적화물은 하역작업을 2번 하기 때문에 수출입화물보다 그 부가 가치가 2배 이상이다. 또한 물동량 카운트 시 2번 카운트되기 때문에 물량증대 효과 역시 2배가 된다. 물동량집계가 늘어남은 것은 그만큼 중심항만으로의 도약이 쉽다는 것이다. 이런 각종 이점 때문에 국내 항만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환적화물 유치가 시달을 겪고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환적화물을 광양항만 몰아주겠다

유승민·윤상현 등 일괄복당 결정

새누리당은 16일 유승민 윤상현 등 탈당과 무소속 복당 문제에 대해 일괄 복당 결정을 내렸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영우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직후 기자회견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일괄 복당하기로 했다”며 “곧 대변인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일괄복당”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탈당 무소속 의원은 유승민, 윤상현, 강길부, 주호영, 안상수, 장재원, 이철규 등 7명이다.

당내에서는 이중 논란이 많은 유승민,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선별 복당시키지는 의견과 7명을 일괄 복당시키지는 의견이 맞서왔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16일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보수의 개혁과 당의 화합을 위해 당원으로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서 당이 국민에게 회복을 드리고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오늘 새누리당 비대위가 저의 복당을 승인했다”며 “당의 결정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지방재정개편’ 진통 심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계획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이 16일 행정자치부를 항의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간사)을 비롯해 김경우, 소병훈, 김영진, 김명호 의원 등 5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행정부를 방문해 홍운

더민주 의원, 행정부 항의방문

식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약 1시30분간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더민주당 의원들은 홍 장관에게 지방재정개편안의 졸속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안행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부와 여·야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장관은 시군조정교부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교부금 배분방식의 변경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면담 후 “오늘 행정부 장관을 만나 정부 방침도 듣고 국회의 입장이거나 문제점을 소상하게 얘기했다”며 “행정부 장관도 안행위와 숙의해가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성주 기자